



성평등가족부, 「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」 결과 발표

- 성폭력 피해 경험률 전체적 감소 속 피해 양상은 변화
- 국민은 최우선 과제로 ‘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책 마련’ 꼽아

- 성평등가족부(장관 원민경)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10,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「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」 결과를 23일(화) 발표하였다.
 - 이번 조사는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,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된다.

[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전체적으로 감소세나, 전 애인 등에 의한 피해 증가]

- 조사 결과,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 - 평생동안 기준으로 통신매체 이용 피해 경험률은 2022년 9.8%에서 2025년 7.6%로 감소하였으며, 성추행 피해 경험률은 3.9%에서 2.4%로, 강간(미수 포함) 피해 경험률은 0.2%에서 0.1%로 각각 줄었다.
- 반면, 전 애인 등에 의한 성폭력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.(여성 응답자 기준, 복수응답, 평생동안 기준)
 - 여성 응답자를 기준으로 전 애인에 의한 불법촬영물·허위영상물 피해 비율은 2022년 13.8%에서 2025년 42.5%로 증가하였다.
 - 같은 기간 전 애인에 의한 성추행 피해 비율은 5.6%에서 14.6%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[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 높아]

-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요(1~3순위)를 조사한 결과, '2차 피해 방지 정책'이 45.7%로 응답률이 가장 높고, 그 다음은 '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' 33.0%, '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' 32.2% 순으로 나타났다.
- 2022년 조사에서는 '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' 42.6%, '안전한 생활환경 조성' 41.5%, '2차 피해 방지 정책' 33.9% 등의 정책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.

[법·제도 '인지도 격차' 잔존, 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의 인지도 낮아]

- 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·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(75~88%)을 보였으나, 세부 운영 제도 간 격차가 드러났다.
- 성폭력 행위 처벌 등 '처벌 중심'의 인지도(79%~88%)는 높은 반면, 친고죄 폐지(59.4%), 불법촬영물 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(57.2%) 등 실제 피해자를 보호하는 세부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.

□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.

- 교제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관계 부처인 법무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.
-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을 위해 '예방·수사·차단·피해자 지원' 전 과정의 범부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, AI 기술 기반 피해 지원과 상담창구·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.
-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고 「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 기준」을 마련하여 올해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.
-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기관의 불이익 조치 금지 대상에 '조력자'를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 권리구제 및 신고 활성화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.

- 친고죄 폐지 등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제도에 대한 안내를 확대하고,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.
- 이번 조사는 지난 2022년 조사체계를 유지해 성폭력 피해양상을 비교 분석하면서 피해 지원체계 이용 경험과 지원 수요, 디지털성범죄 유형 등 최근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해 조사 문항을 보완했다.
 - 「성폭력 안전실태조사」는 내년부터 「여성폭력 실태조사」로 통합 조사된다.
-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"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증가와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"라며
 - "디지털성범죄와 교제폭력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,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"고 밝혔다.

- 【붙임】** 1.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개요
 2.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주요결과

| 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안전인권정책관 성폭력방지과 | 책임자 | 과 장 | 송지은 | (02-2100-6391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조의성 | (02-2100-6395) |
| | | | 주무관 | 박정희 | (02-2100-6393) |



□ 조사 개요

- (목 적) 법·제도 인지도,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피해실태 및 대응 등을 파악하여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
- (근 거)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제4조(성폭력 실태조사)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.

* 「통계법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승인통계

- (조사주기) 3년('07년 최초 실시)

□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

- (조사대상)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10,000명

* 최종 10,151명 완료

- (조사내용)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법·제도 인지도,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요, 성폭력에 대한 인식, 성폭력 피해 경험, 성폭력 피해 영향 및 대응 등

*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

- 성별, 나이, 학력, 혼인 상태, 장애 여부, 취업 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
- 성폭력 발생 원인, 발생 유형, 폭력 유형 등 성폭력피해 등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성폭력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(조사방법) 태블릿피시(PC)를 활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와 온라인 조사 등 병행
- (연구기간) 2025년 4월~12월 * 조사기간 : 2025년 8월~10월
- (수행기관) 한국여성정책연구원, (주)한국갤럽조사연구소

- ◆ **(피해 경험 및 실태)** 평생동안 성폭력 피해율은 통신매체 이용 피해 7.6%, 성기노출 피해 5.9%, 성추행 피해 2.4%,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피해 0.3%, 강간(미수 포함) 피해 0.1% 순임
 - 전체적으로 성폭력 피해율은 2022년(통신매체 이용 피해 9.8%, 성추행 피해 3.9%, 강간(미수 포함) 피해 0.2%) 대비 감소
 - 다만,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피해 여성의 가해자 유형(복수응답, 평생동안 기준)은 전 애인(42.5%), 애인(18.1%), 배우자(13.4%) 등의 비율이 높음
 - 강간(미수 포함) 피해를 경험한 당시 상황(복수응답, 평생동안 기준, 여성 응답자 기준)은 강요(84.4%), 속임(47.7%), 협박(47.6%) 순으로 폭행(25.5%), 협박도 있었지만 속임, 회유(31.1%) 등의 비율도 상당했고, 특히 강요는 매우 높은 응답비율을 보임
- ◆ **(성폭력 관련 인식 및 두려움)** “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이다”가 38.7%로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높고, 여성 응답자의 경우 ‘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폭력을 겪을까봐 두렵다’가 53.1%로 가장 높게 나타남
- ◆ **(2차 피해 경험)** 성폭력 피해 경험 여성의 경우 “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말해봐야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”(16.0%), “네가 그런 행동을 할 여지를 주었다”(12.6%), “성폭력 피해를 겪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”(11.4%) 등의 말을 들은 경험이 높게 나타남
 - 전반적으로 피해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거나 피해 신고 등 피해자의 대응을 위축시키는 유형의 경험이 확인됨
- ◆ **(법·제도 인지도 및 정책 수요)** 지원기관(해바라기센터 등 73.6%, 여성긴급전화 1366 70.2%) 인지도는 높으나,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대리 삭제요청 가능(48.2%) 및 친고죄 폐지(59.4%) 인지도는 낮음.
 - 성폭력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수요(1~3순위)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‘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’(45.7%)임

1

성폭력 피해율은 전체적으로 2022년보다 감소, 피해 양상은 변화

□ 개 요

-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2022년 대비 감소하였으나, 전체 응답자와 여성 응답자의 경우 성기노출 피해(-3.4%p, -6.0%p) 등 오프라인 성폭력 피해보다 불법촬영물·허위영상물 유포 피해(-0.1%p, -0.1%p)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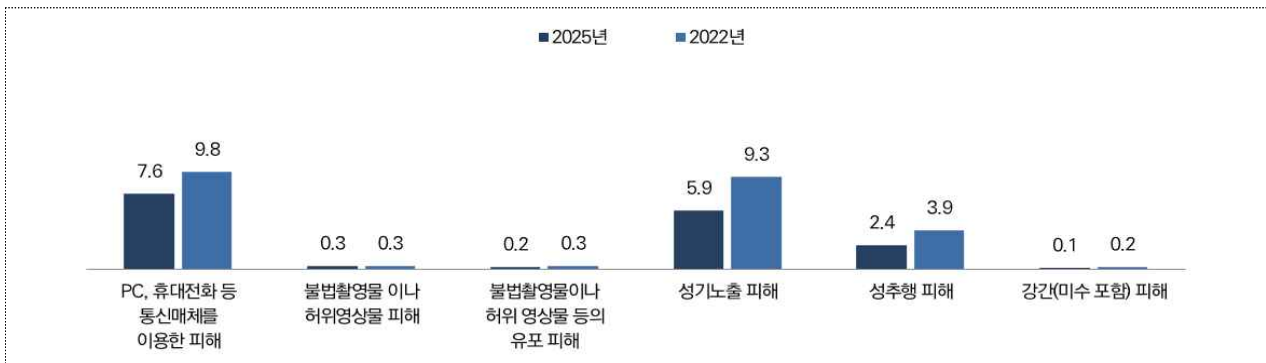
< 연도별 평생동안 성폭력 피해율(2022, 2025) >

(단위: %, %p)

| 구분 | 전체 | | | 여성 | | | 남성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|
| | 2022 | 2025 | 증감 ('25-'22) | 2022 | 2025 | 증감 ('25-'22) | 2022 | 2025 | 증감 ('25-'22) |
| PC,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 이용 피해 | 9.8 | 7.6 | -2.2 | 9.2 | 7.6 | -1.6 | 10.3 | 7.6 | -2.7 |
|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피해 | 0.3 | 0.3 | 0.0 | 0.4 | 0.4 | 0.0 | 0.2 | 0.2 | 0.0 |
| 불법촬영물이나 허위 영상물 등의 유포 피해 | 0.3 | 0.2 | -0.1 | 0.3 | 0.2 | -0.1 | 0.3 | 0.2 | -0.1 |
| 성기노출 등 목격 피해 | 9.3 | 5.9 | -3.4 | 16.6 | 10.6 | -6.0 | 2.4 | 1.4 | -1.0 |
| 성추행 피해 | 3.9 | 2.4 | -1.5 | 7.0 | 4.5 | -2.5 | 0.9 | 0.5 | -0.4 |
| 강간(미수 포함) 피해 | 0.2 | 0.1 | -0.1 | 0.4 | 0.2 | -0.2 | 0.0 | - | - |

- (성폭력 피해 경험률) 통신매체 이용 피해 7.6%, 성기노출 피해 5.9%, 성추행 피해 2.4%, 불법촬영물·허위영상물 피해 0.3%, 유포 피해 0.2%, 강간(미수 포함) 피해 0.1%로 나타남

(단위 : %)



< 성폭력 피해 경험률(2022년과 2025년, 평생동안) >

□ 성폭력 피해 유형에서 전·현 애인, 배우자 등에 의한 폭력 양상 확인

※ 유형별 피해 경험 기준임

- (불법촬영물·허위영상물 피해) 여성 응답자 기준으로 가해자 유형(복수응답)은 전 애인에 의한 피해 비율이 2022년 13.8%에서 2025년 42.5%로 증가함
- 또한 애인(10.3%→18.1%), 배우자(6.0%→13.4%)에 의한 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
<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피해 경험(가해자 유형)>

(단위: %)

| 구분 | 전체 | 여성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
| 가해자 유형(복수응답) | | |
| 배우자(사실혼 포함) | 9.6 | 13.4 |
| 전 배우자(사실혼 포함) | 4.7 | 6.6 |
| 애인 | 18.8 | 18.1 |
| 전 애인 | 30.2 | 42.5 |
| 가족(배우자 제외), 친인척 | - | - |
| 친구 | 4.2 | 5.9 |
| 학교 선후배, 동급생, 교수, 학교선생, 학원 강사 | 9.8 | 4.6 |
| 직장 상사, 동료, 거래처 사람 | 14.1 | 3.1 |
| 소개팅, 맞선 등으로 만난 사람 | 4.1 | 5.7 |
|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 | 2.2 | 3.1 |
| 전혀 모르는 사람 | 21.4 | 14.6 |
| 행위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하지(파악하지) 못함 | - | - |
| 기타 | - | - |

- (불법촬영물·허위영상물 유포 피해) 여성 응답자 기준으로 가해자 유형(복수응답)에서 배우자(18.8%), 전 배우자(13.4%), 애인(11.0%), 전 애인(10.3%) 등이 높은 비중
- (성추행 피해) 성추행의 가해자 유형(복수응답, 여성 응답자 기준)도 '전 애인'이 2022년 5.6%에서 2025년 14.6%로 증가

□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 유포 피해의 인지 경로는 유포자의 협박 계기

※ 피해 경험 응답자 기준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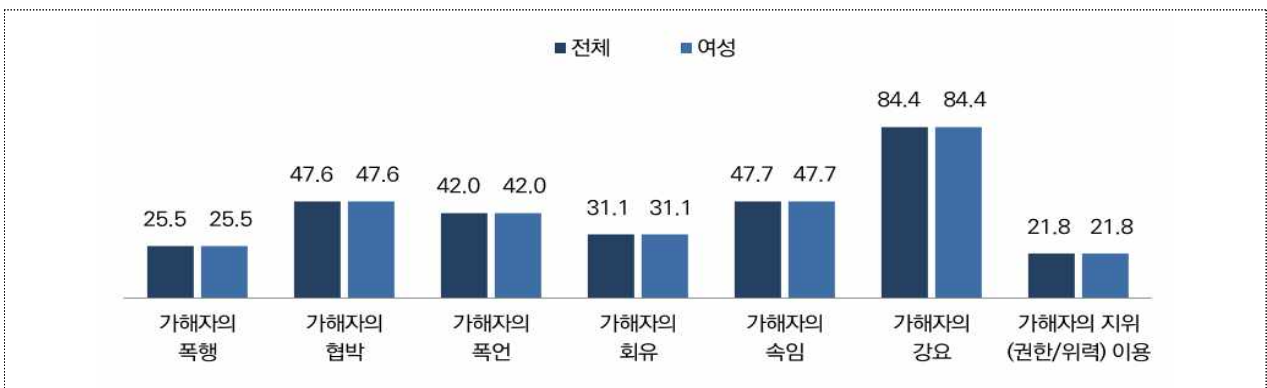
- (유포자의 협박을 통한 피해 인지 증가) 유포 피해 인지 경로는 '유포자의 협박을 계기로'(37.0%)와 '주변 지인을 통해'(35.0%)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
 - 여성 응답자의 경우도 '주변 지인을 통해'(34.1%)와 '유포자의 협박을 계기로'(32.3%)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, 2022년에는 유포자 협박 응답이 없고 '주변 지인을 통해'(75.1%)가 대다수였음
 - 유포 협박을 통해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경향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
- (추가 유포에 대한 두려움 여전) 추가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응답(약간 느꼈다+매우 느꼈다)은 61.3%임
 - 여성 응답자의 경우 85.1%로, 이는 2022년 여성 응답(77.9%) 대비 7.2%p 상승한 수준임

□ 강간(미수 포함) 피해의 복합적 양상

※ 피해 경험 응답자 기준임

- (강요·속임 등 발생) 강간(미수 포함) 피해 당시 상황(복수응답)에서 가해자의 강요(84.4%), 속임(47.7%), 협박(47.6%), 폭언(42.0%), 회유(31.1%), 폭행(25.5%) 순으로 응답 비율이 나타남
 -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도 있었지만, 강요, 속임, 회유 등의 비율도 상당했고, 특히 강요는 매우 높은 응답비율을 보임

(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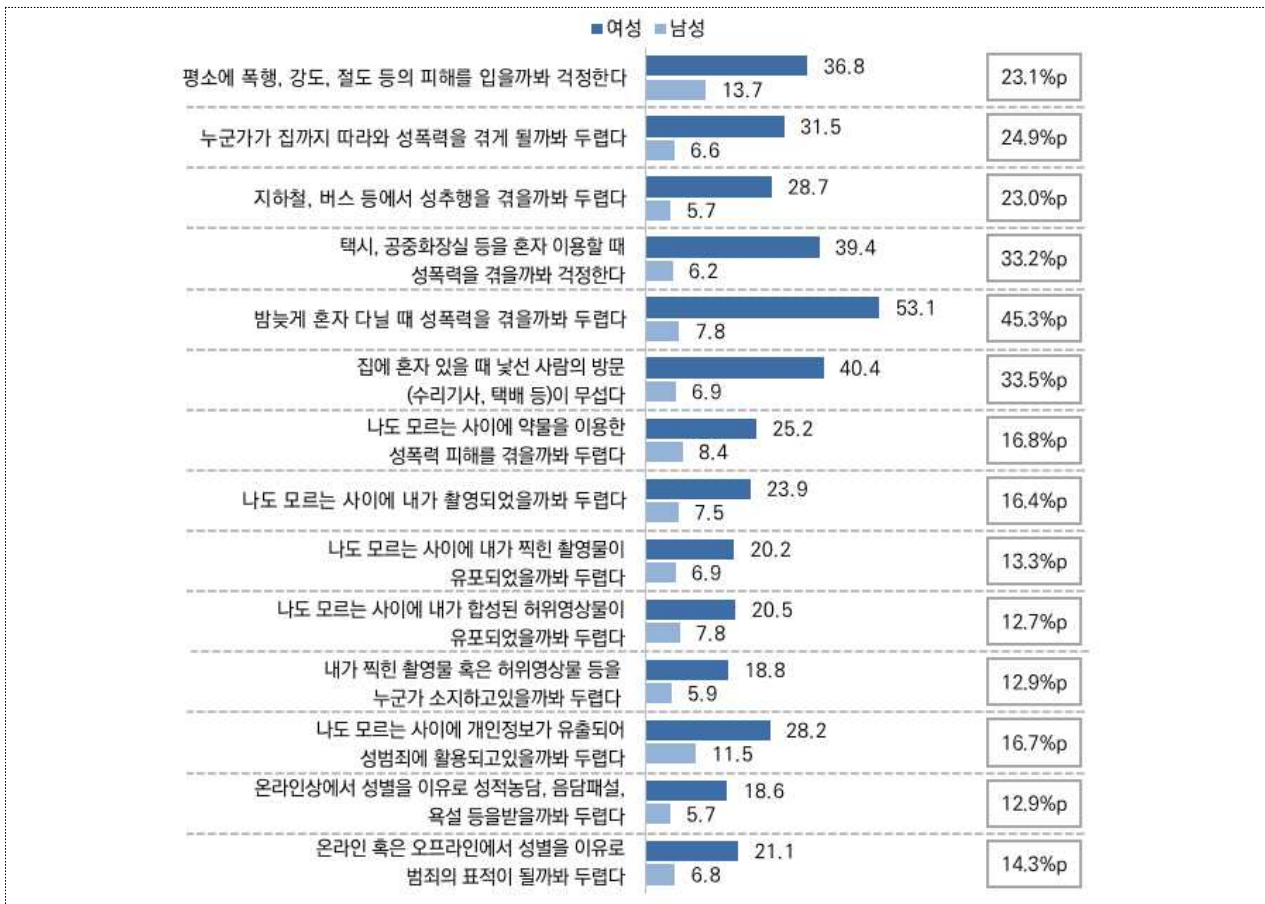
< 강간(미수) 피해 경험-피해 당시 상황(복수응답) >

2

여성의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남성보다 커

- (혼자 있는 일상 공간에서의 성폭력 피해 두려움) 여성은 밤늦게 혼자 다닐 때(53.1%),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(40.4%), 택시·공중화장실 혼자 이용(39.4%) 등에서의 성폭력 피해 두려움이 높게 나타남
- 이외 약물 이용 성폭력(25.2%), 불법촬영(23.9%), 불법촬영물 유포(20.2%), 허위영상물 유포(20.5%) 등 약물 이용 성폭력뿐 아니라 디지털성범죄 관련 두려움도 20% 이상 수준으로 나타남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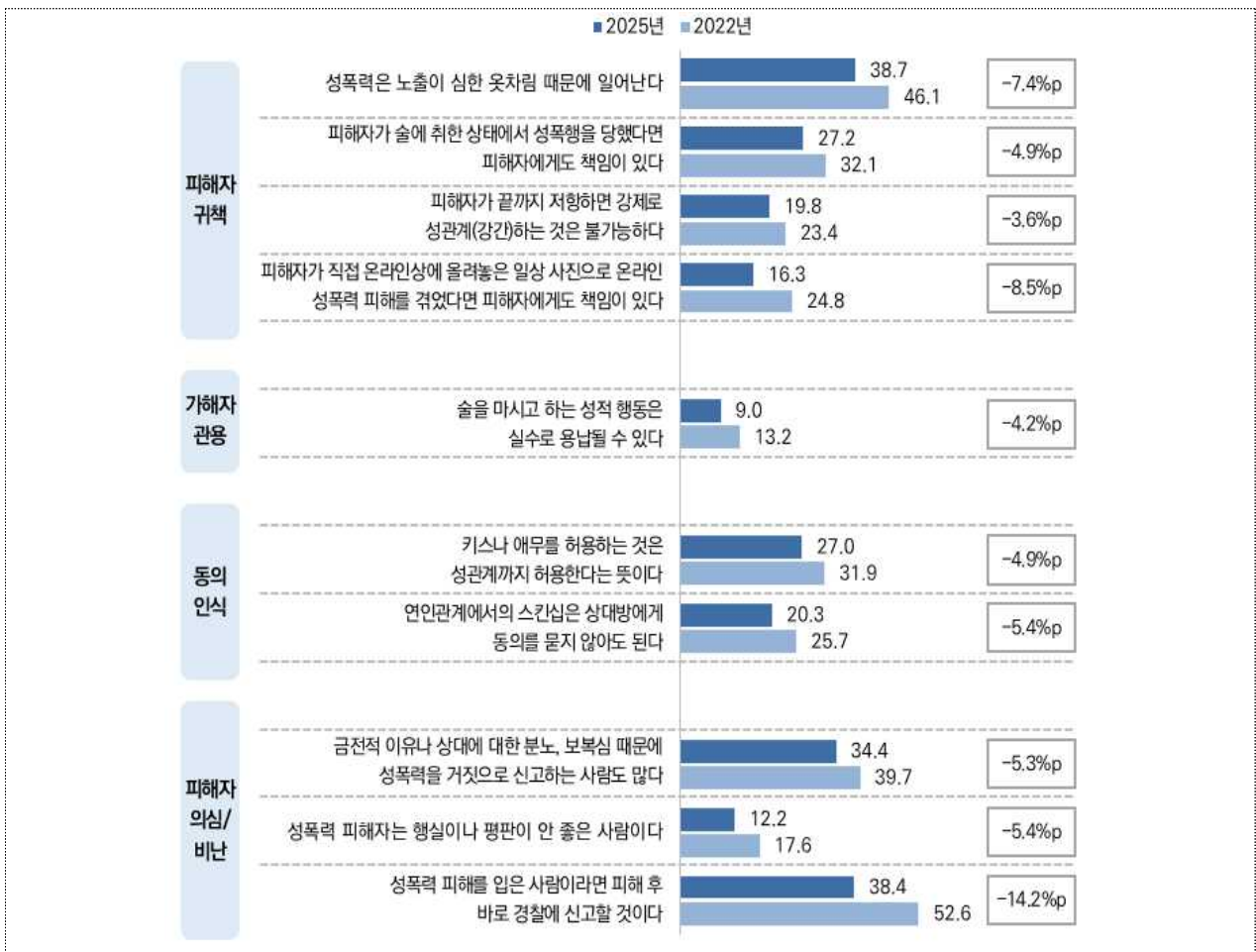


<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(성별) >

3 성폭력 관련 통념은 개선되었으나 피해자 비난·의심 인식은 여전

- (피해자 책임 전가 및 의심 인식) 노출이 심한 옷차림이 성폭력 원인이라는 응답은 38.7%,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27.2%로 나타남
- “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피해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.”(38.4%), “금전적 이유나 상대에 대한 분노, 보복심 때문에 성폭력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많다”(34.4%) 등 피해자 비난 및 의심 경향이 여전히 존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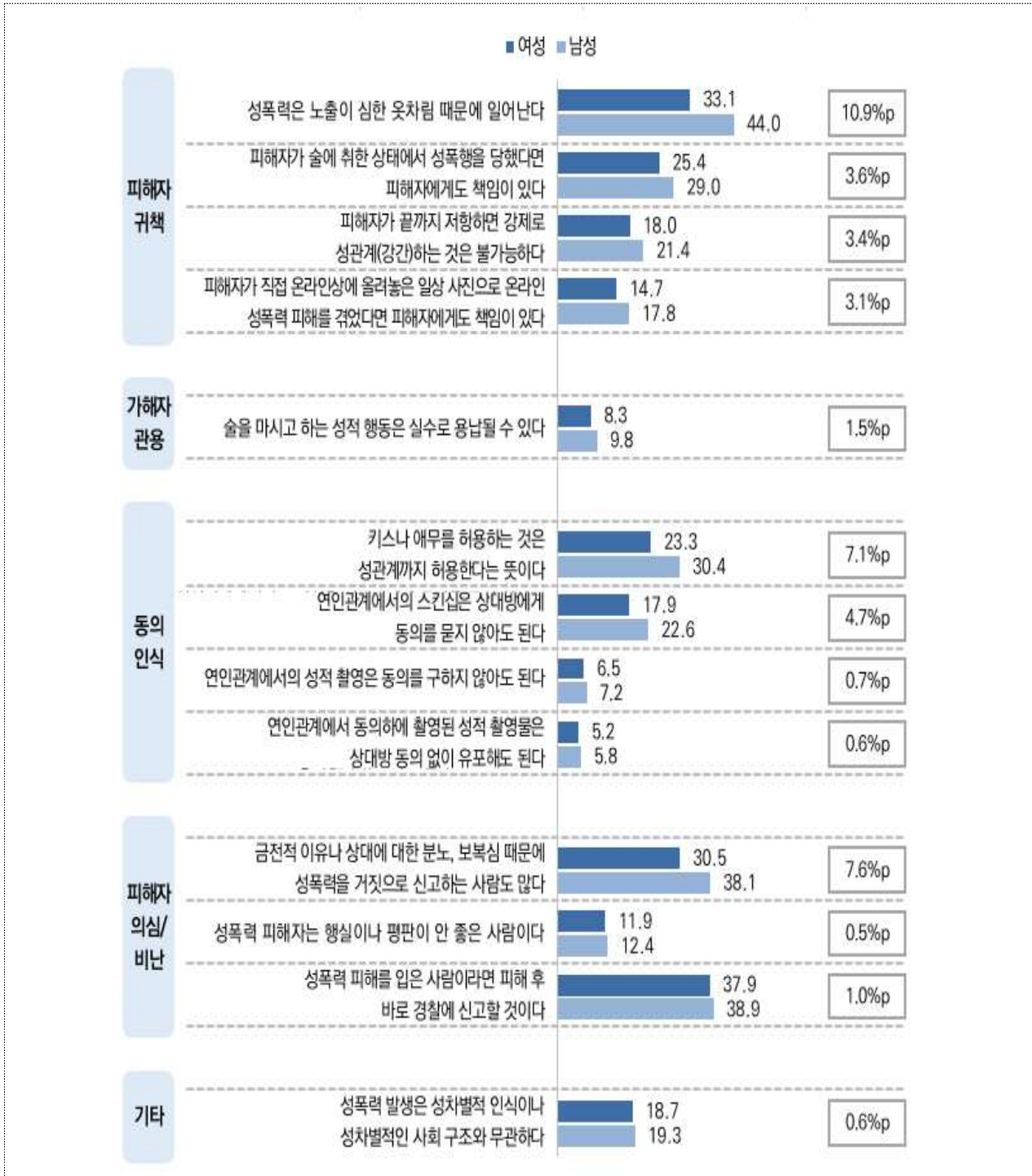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<성폭력 관련 인식(전체)(2022년, 2025년 비교)>

□ (성별에 따른 통념 수준 격차) 특히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(남성 44.0%, 여성 33.1%), 거짓 신고가 많다(남성 38.1%, 여성 30.5%), 키스·애무는 성관계 허용 의미(남성 30.4%, 여성 23.3%) 등에서 격차가 확인됨

(단위 : %)



<성폭력 관련 인식(성별)>

- (피해 사실 축소·비난·침묵 유도 등 2차 피해 경험 존재) 여성과 남성 모두 전반적으로 피해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거나 피해 신고 등 피해자의 대응을 위축시키는 유형의 경험이 확인됨
- 여성(성폭력 피해 경험자 기준)의 경우 “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말해봐야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”(16.0%), “네가 그런 행동을 할 여지를 주었다”(12.6%) 등의 말을 들은 것으로 나타남
- 남성 또한 “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말해봐야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”(11.3%), “친해서 한 행동(말)인데 네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”(10.5%) 등의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됨

(단위 : %)



<성폭력 피해 이후 2차 피해(말이나 경험) 여부>

5

성별에 따른 성폭력 피해 대응 및 지원 이용 양상의 차이

※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기준임

□ 성폭력 피해 신고율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

- (신고하지 않은 주요 이유는 피해가 경미하다는 인식) 성폭력 피해 이후 경찰 신고율은 1.8%(여성 2.4%, 남성 0.7%)이며,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여성과 남성 모두 “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”(71.0%, 76.8%)가 가장 큼 - “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”(여성 31.5%, 남성 24.9%), “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(여성 31.6%, 남성 23.4%)가 그 뒤를 이음

<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(복수응답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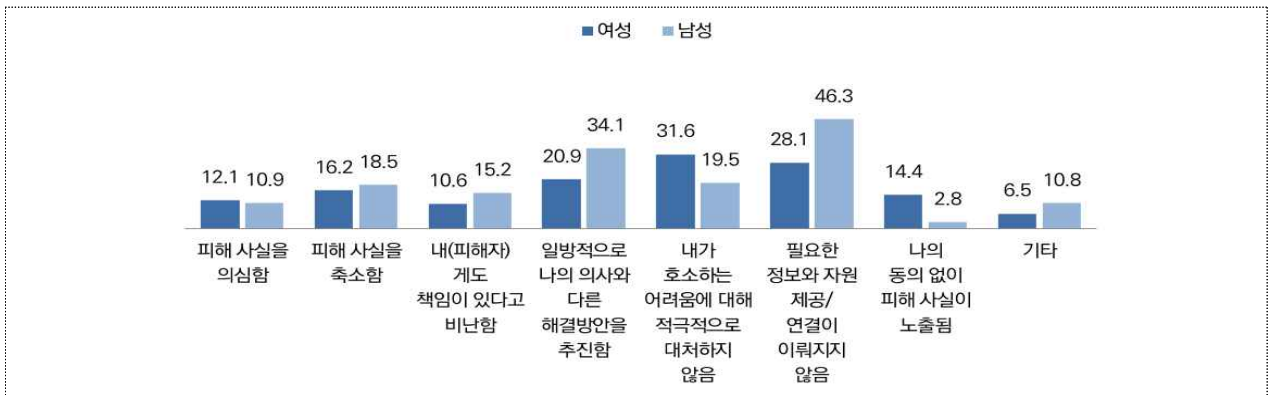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| 구분 | 범인이 아는 사이 혹은 친밀한 관계여서 |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|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|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| 협박, 괴롭힘이나 추가적인 피해 등 보복이 두려워서 |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| 수사 기관에서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|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걸 몰라서 | 명예 훼손이나 무고 등 가해자의 역고소가 우려되어 | 공소 시효가 지나서 | 기타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
| 전체 | 18.0 | 73.0 | 29.2 | 19.8 | 11.7 | 28.7 | 4.0 | 6.8 | 1.3 | 1.4 | 1.1 |
| 여성 | 16.5 | 71.0 | 31.5 | 24.7 | 13.3 | 31.6 | 3.6 | 9.0 | 0.9 | 1.7 | 1.3 |
| 남성 | 20.8 | 76.8 | 24.9 | 10.8 | 8.9 | 23.4 | 4.7 | 2.7 | 2.0 | 0.9 | 0.9 |

□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 존재

- (지원 과정의 아쉬움) 여성은 “내가 호소하는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음”(31.6%)의 경험이 높았고, 남성은 “필요한 정보와 자원 제공/연결이 이뤄지지 않음”(46.3%)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(단위 : %)



<성폭력 피해 관련 문의/상담 또는 지원/도움 받으면서 경험한 내용(성별)(복수응답)>

6

성폭력 관련 제도 간 인지도 격차 존재

□ 피해자 지원제도 인지도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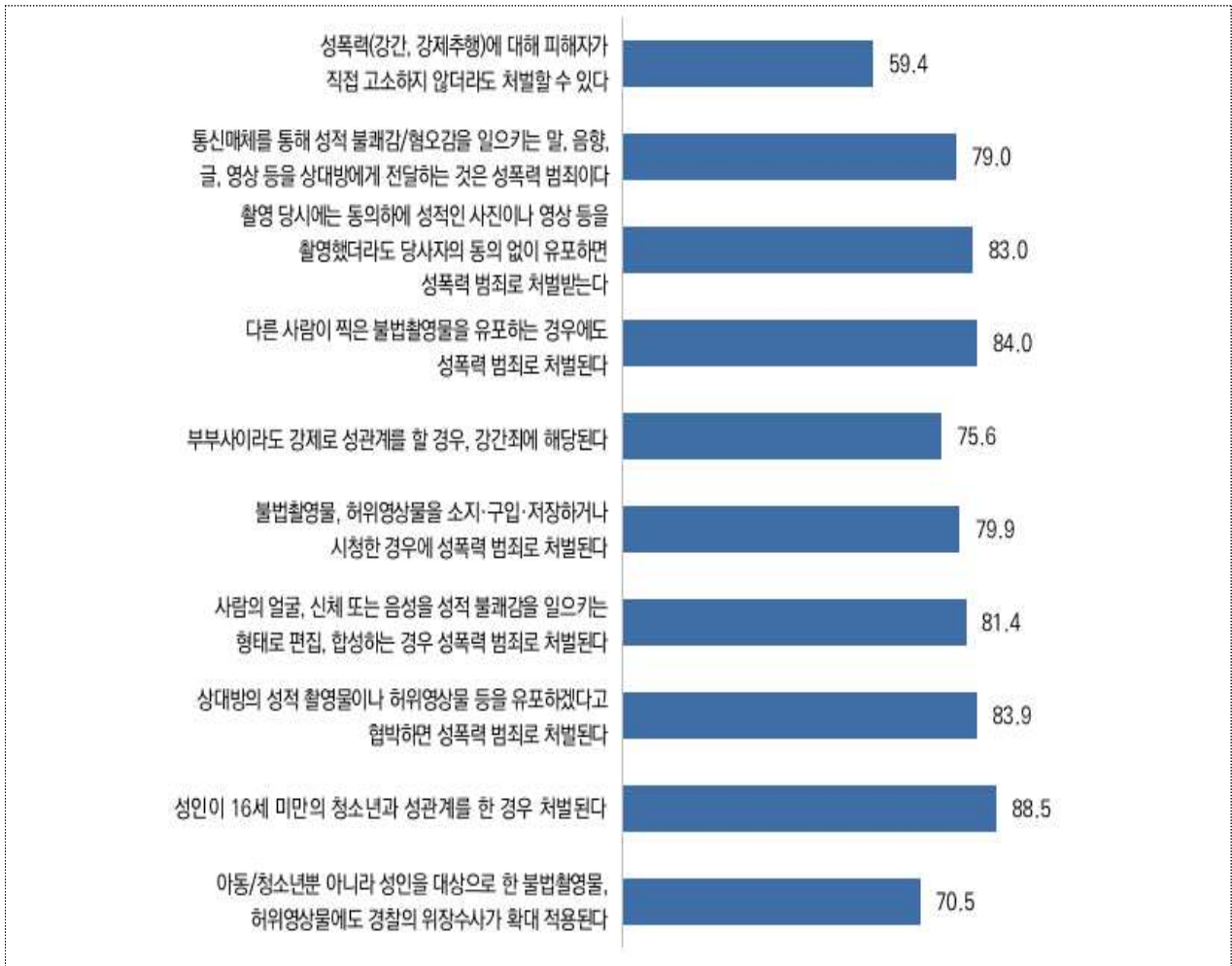


<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(전체)>

- (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인지도는 70% 내외 수준)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 인지도는 73.6%, 여성긴급전화 1366은 70.2%,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61.8%로 나타남
- (디지털성범죄 세부 제도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음)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(57.2%) 및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대리인 삭제 지원 요청권(48.2%)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

□ 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·제도 인지도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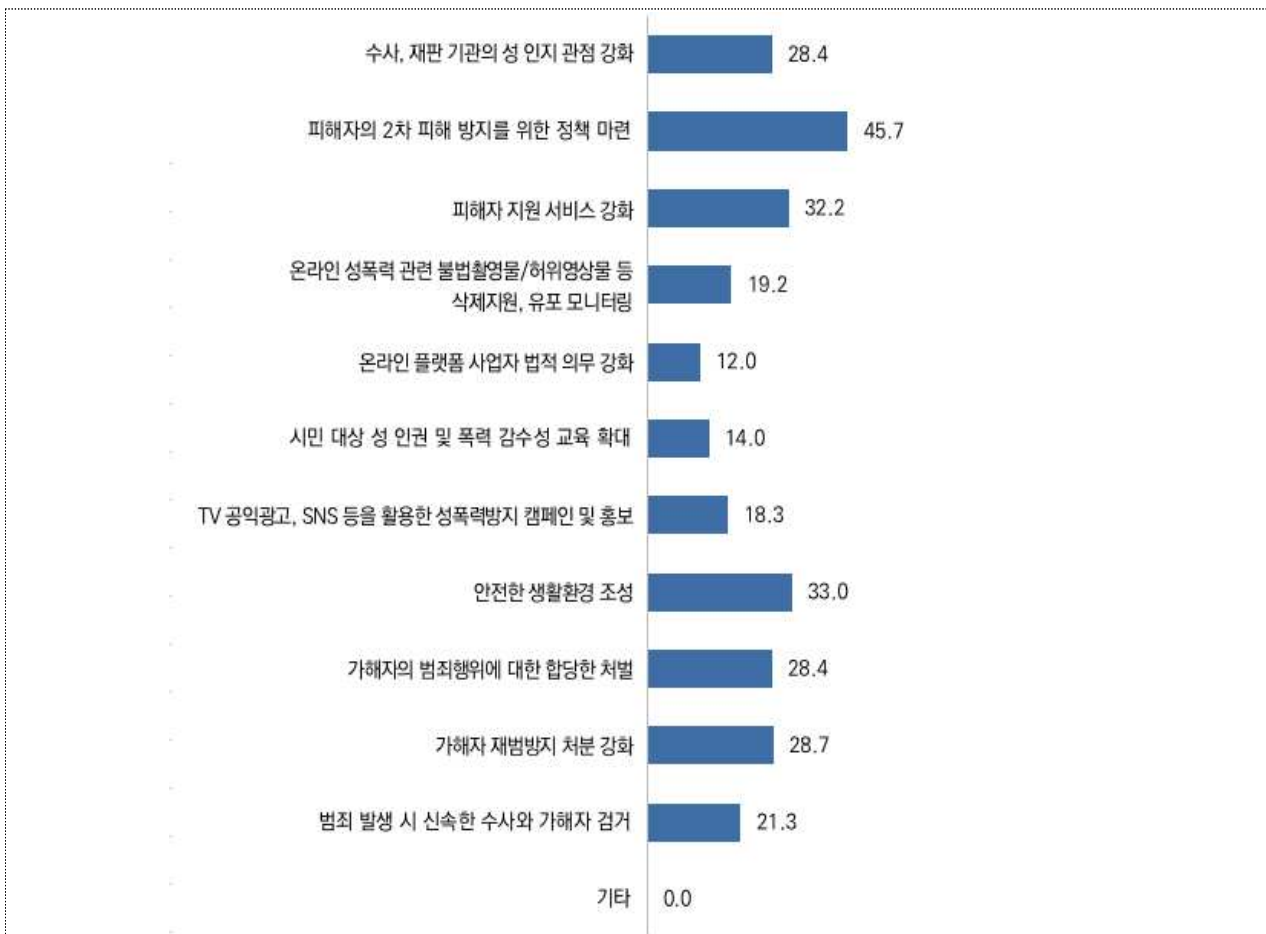


<성폭력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인지도(전체)>

- (처벌 및 행위 인지도는 대체로 높은 수준) 성폭력 행위 처벌, 디지털 성범죄 구성요건 등 대부분 항목에서 75% 이상의 인지도를 보임
 - 특히 16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(88.5%)은 가장 높은 수준임
- (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법·제도 내용) 반면 친고죄 폐지(59.4%)나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, 허위영상물 위장수사(70.5%) 등 제도적 대응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음

- 피해자 중심 정책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남
- (2차 피해 방지 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제시)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1~3순위 응답을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'2차 피해 방지 정책(45.7%), '안전한 생활환경 조성'(33.0%), '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'(32.2%), '가해자 재범방지 처분 강화'(28.7%) 순임
 - 2022년에는 1~3순위 응답에서 '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'(42.6%), '안전한 생활환경 조성' (41.5%), '2차 피해 방지 정책' (33.9%), '범죄 발생 시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'(33.6%) 등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음

(단위 : %)



<성폭력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수요(1~3순위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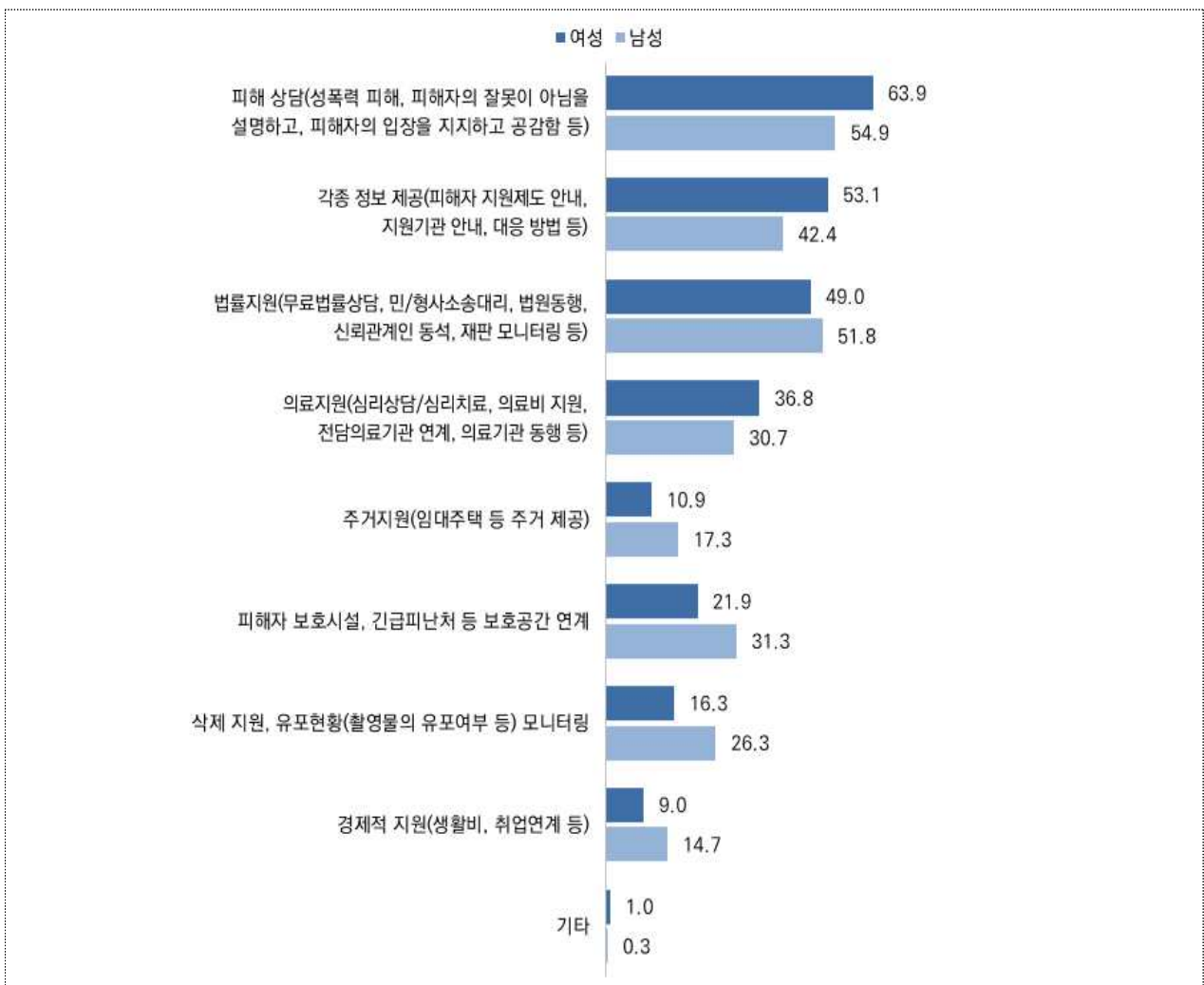
8

성폭력 피해자의 주요 지원 수요는 상담·정보·법률·의료지원 중심

※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기준임

- (피해자 지원 수요는 상담 및 정보 제공 중심) 성폭력 피해 대응 및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수요에 대한 1~3순위의 응답을 종합한 결과, 피해 상담(여 63.9%, 남 54.9%), 정보 제공(여 53.1%, 남 42.4%) 순으로 나타남
- 법률지원(여 49.0%, 남 51.8%), 의료지원(여 36.8%, 남 30.7%)에 대한 수요도 높은 수준임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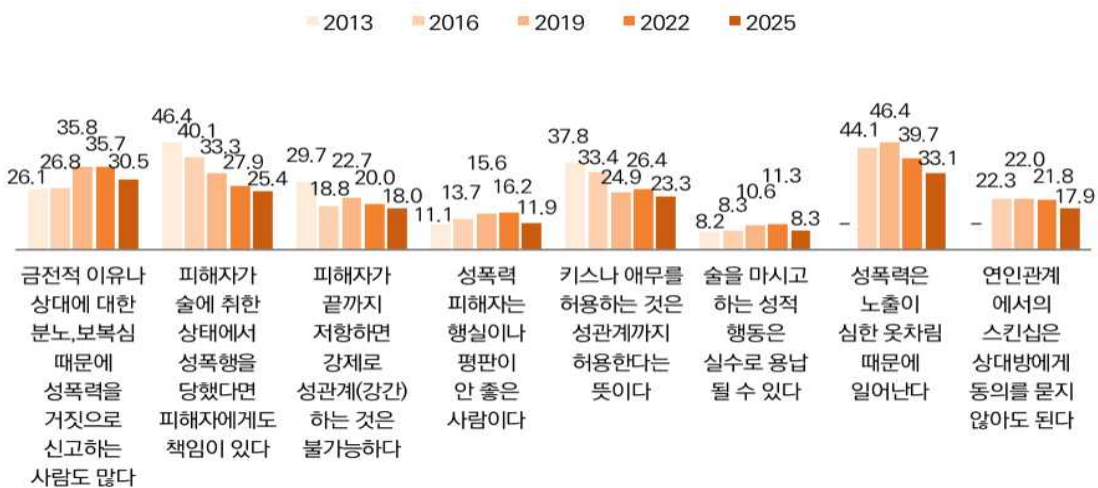


<성폭력 피해에 대응하고 회복하는데 필요한 지원(1~3순위)(성별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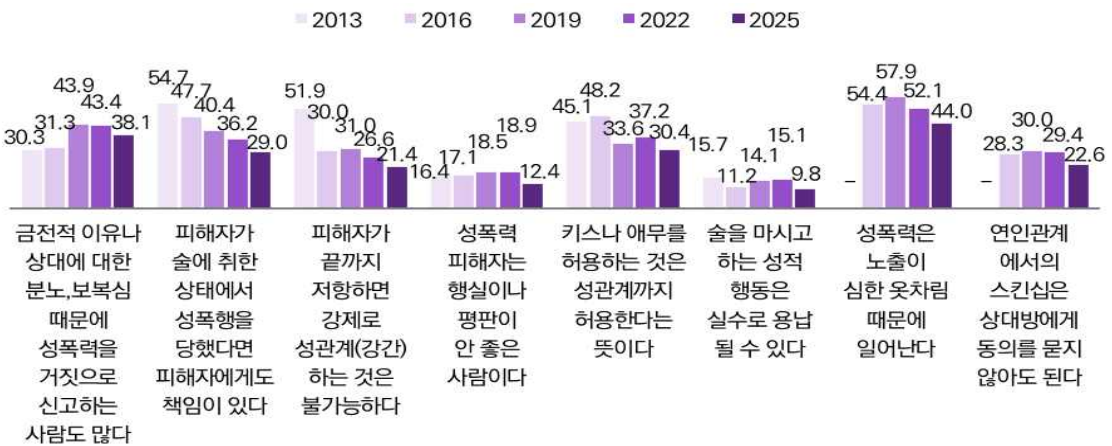
- (성폭력 관련 인식 개선) 연도별 증감은 있으나, 남녀 모두 전반적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통념에 대한 동의 비율이 낮아져 성폭력 관련 인식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임
 - 다만, 여전히 여성과 남성의 격차는 존재

(단위 : %)

[여성]



[남성]



<연도별 성별 성폭력 관련 인식 추이(2013, 2016, 2019, 2022, 2025)>

□ (2차 피해 증가 경향 및 성별 격차 지속) 최근 조사일수록 2차 피해 경험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, 여성의 2차 피해 경험률이 대부분의 문항에서 남성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

(단위 : %)

[여성]



[남성]



<연도별 성별 성폭력 피해 이후 2차 피해 추이(2016, 2019, 2022, 2025)>